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재정통계 개편안과 국가부채 재계산

□ 기획재정부는 1월 26일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마련한 재정통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함.

- 2011년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정부결산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어 재정통계 기준도 발생주의 기준으로 정비하고, 최신 국제 통계기준의 적용을 통해 국가 재정통계의 신뢰성·투명성을 제고하여 국가채무와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.
-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2월 중 개편안을 확정하고 국가재정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, 재정정보 시스템 정비,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2011년 재정통계 자료를 산출할 계획임.

□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와 민간기금 20개의 부채, 미래에 지급해야 할 관급 공사대금과 선수금·예수금이 국가부채에 포함되나 기금과 공공기관의 국채 보유분은 정부간 내부거래여서 국가부채에서 제외됨.

- 개편안에 따르면 282개 공공기관 중 원가보상률*이 50% 미만인 곳이 일반정부의 범위에 추가되어 14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로 전환됨.
 - 하지만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 LH나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21개는 모두 원가보상률이 50% 이상이어서 국가부채에서 제외됨.
- 민간관리기금 중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20개 기관의 부채도 국가부채로 분류되며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정부지급금 등의 미지급금과 선수·예수금도 국가부채에 포함됨.
- 사실상 국가부채라고 논란이 됐던 보증채무, 한국은행 통안증권의 경우와 회계상 정부에 포함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 총당부채는 국제기준을 이유로 국가부채에서 제외됨.
 - * 원가보상률은 생산원가 대비 판매액 비중을 말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정부적 성격보다 기업적 성격이 강함.

□ 개편안에 따른 국가부채 규모는 지금보다 최소 수조원에서 최대 수십조원 가량 늘어나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기준을 내세워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서 제외한 것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.

(재정통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, 기재부, 1/26)